

국회미래연구원 브라운백 미팅

데이터 기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분석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19.12.13

국회미래연구원

-List-

- I. 이해충돌방지의 필요성
- II.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 쟁점
- III. 소셜빅데이터 분석
- IV. 행동과학 기반 입법 분석
- V. 설문조사 결과

I. 이해충돌방지의 필요성

이해충돌의 의의와 방지필요성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상황으로,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를 말함 (OECD)

❖ 왜 방지되어야 하나?

-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민주적인 정부의 기능을 훼손
-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 공정성 및 공정성을 약화
- 법의 지배,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시장의 기능 및 공공 자원의 분배 왜곡

II. 이해충돌방지 법안 주요 쟁점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 현황

	정부 원안	안철수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법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제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법률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발의일	'13. 8월	'16. 8월	'18. 4월	'19. 1월	'19. 2월
진행 상황	임기만료 폐기	소위 계류중		전체회의 상정대기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 현황

	정부 원안	안철수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공통 규정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영향배제와 이해충돌방지 의무(총칙규정)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직무수행 방법				
	공직자의 소속기관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공기관의 물품·직위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 제한				
다른 규정	사적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사적이해관계등의 등록 및 신고등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외국의 입법 사례

국가	이해충돌 관련 법령	관련 제도
미국	「정부윤리법」(1978)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 관련 업무에서의 제척, 대외 소득 및 고용
	「윤리개혁법」(1989)	행정부·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연방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 선물과 여행, 대외적 취업의 제한과 사례금 수령금지
	「공무원 윤리규정」	행정부 재산신고, 수권신탁과 매각증서, 행정부 피용자의 윤리행동기준
캐나다	「이해충돌법」 (2006)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금지, 보고대상 공직자의 금지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선물 및 기타 이익 수수금지
호주	「연방 공무수행법」 (1998)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실제적 혹은 명백한 ‘이해충돌 선언의무’
	「공무원 행동 강령」	이해충돌 방지 의무, 기관장, 고위 공무원 등 재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해충돌 신고,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내부 정보 활용 금지
프랑스	「공직 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법」(2013)	거짓 및 부실 신고 금지, 회의 참가 제한, 사퇴 의무, 이해관계 신고 의무

주요 입법 연혁

연 혁	주요 입법	주요 내용
1981년 12월	「공직자윤리법」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 및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규정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2003년 5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금품·향응 수수행위 제한, 직위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 금지 등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 원안) 국회 제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제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제한 이해충돌방지분야 제외 , 적용범위에 사립학교, 언론사 추가
2019년 7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 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안 법체계

장	조 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공직자의 의무)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제11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제12조(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제13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14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5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장	조 항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7조(위반행위신고의 처리)
	제18조(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
	제19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2조(교육과 홍보 등)
	제2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4조(징계)
	제25조(벌칙)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과태료 부과)
	제1조(시행일)
부 칙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III. 소셜 빅데이터 분석

입법 분석 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기준 유형
필요성 (목적 정당성)	입법의 필요
적정성	과잉금지
	정의
	요건/기준 부적정
	책임/권한
	권리보호수단
	행정(절차)/비용부담
	관할 기관
	제도/정책의 적정성
효과성	목적 달성 효과
실효성	제재
	관할 부처
	사후 관리

평가 기준	세부 평가 기준 유형
체계정합성	합헌성
	법간 충돌
	법간 중복
	법령 내 충돌
	법률유보(위임입법)
	타법과의 관계
명확성	타법 관계
	개념 포섭
	개념정의 미비
	개념불일치
	요건/기준 불명확
	책임/권한의 불명확

모집단 구성을 위한 키워드

분석 기준		키워드
입법 필요성		공직자, 직무수행, 사적 이익, 이해충돌, 공정, 신뢰
입법 적정성		신고,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가족, 직무, 제한, 회피, 기피, 계약, 제출, 3년, 거래, 외부활동,
입법 효과성		공정, 청렴, 저해, 저해+우려, 신뢰, 우대, 차별
입법 실효성		신고, 과태료, 벌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장
입법 명확성		사적이해관계, 가족, 직무관련자, 직무,
법체계 정합성	헌법	직업선택 자유, 공무담임권
	관련법 관계	민법, 부정청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다른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해충돌법 관련 소셜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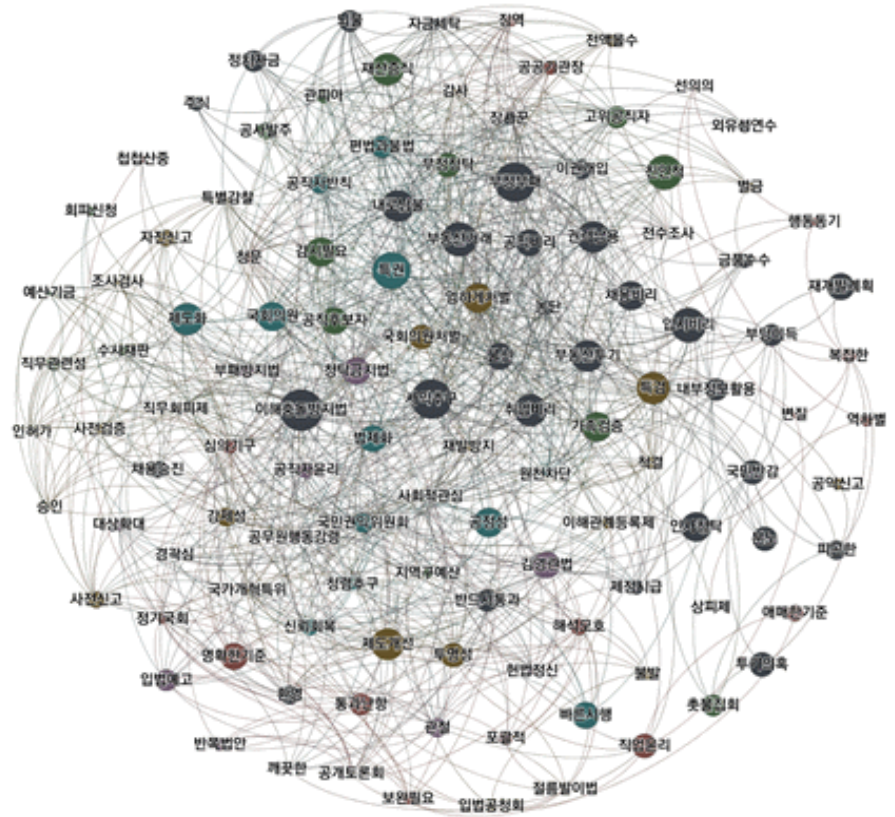
5.5년

2014.1.1.~2019.8.30

수집
채널

총
1,153,80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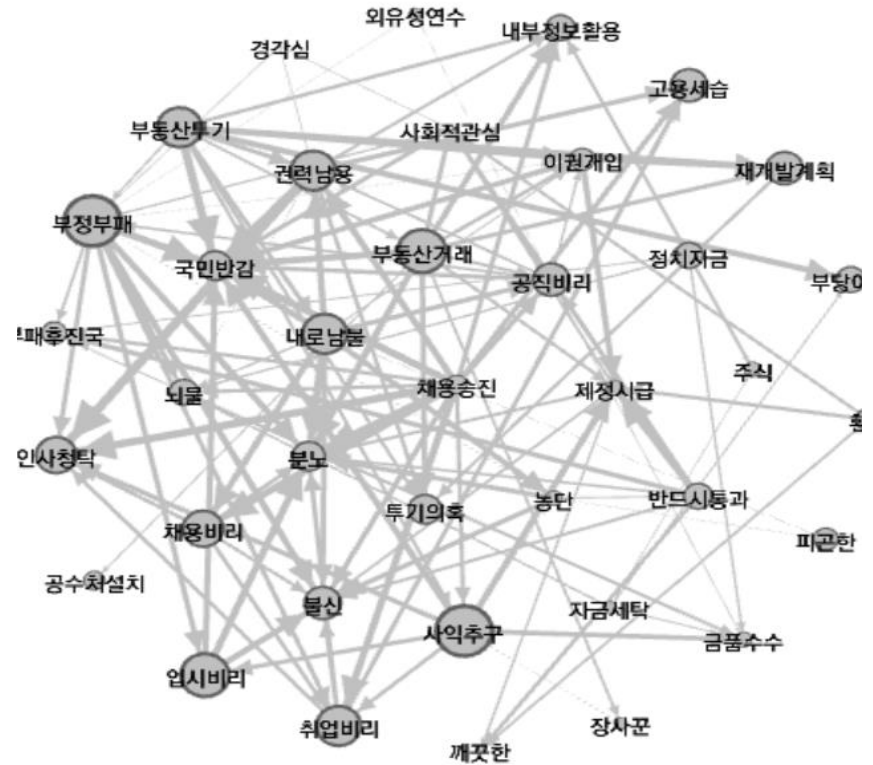
- 625,300건 뉴스 기사 (댓글 포함)
 - 528,560건 소셜미디어(온라인 문서 포함)
- | | |
|----------------|--|
| •중앙지 총
12개사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 •경제지 총
8개사 |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 •방송사 총
4개사 | KBS, MBC, SBS, YTN |
|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클리앙, 다음, 네이트 등)
온라인 문서 포함 |



필요성	(30.25%)
실용성	(21.85%)
의의성	(16.81%)
적용성	(12.61%)
효과성	(10.08%)
정합성	(8.4%)

(1) 입법의 필요성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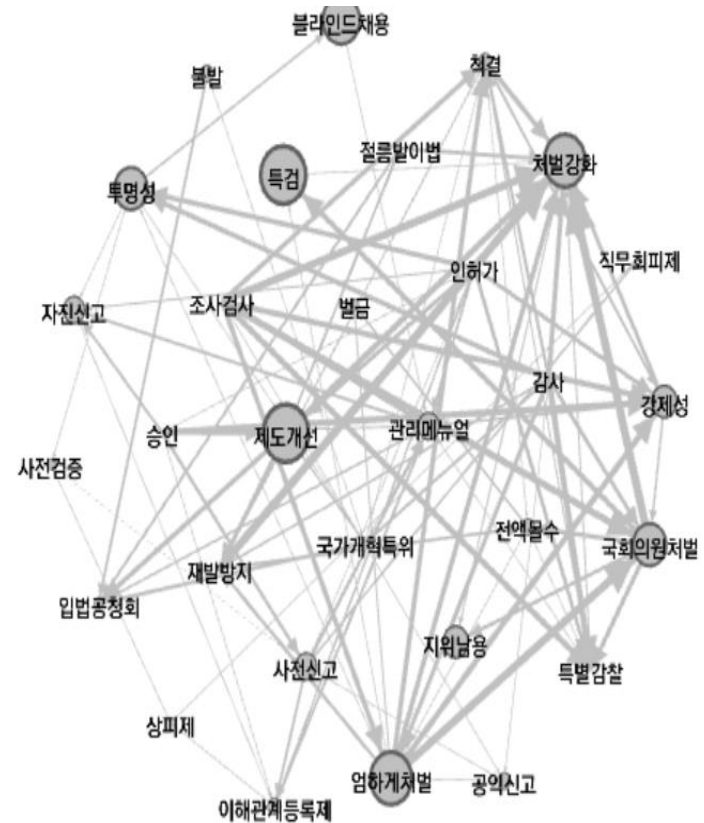
주요 이슈	관련 용어
부패	불신, 부정부패, 권력남용, 사익추구, 부당이득, 국민반감, 농단
입법	제정시급, 반드시통과, 사회적관심, 환영, 분노
부동산	부동산투기, 재개발계획, 부당이득, 부동산거래, 투기의혹, 내부정보활용
채용.입시	고용세습, 채용비리, 채용승진, 인사청탁, 취업비리, 입시비리
금품수수	뇌물, 자금세탁, 정치자금, 주식
내부정보활용	부동산, 채용.승진, 주식



이해충돌법 관련 소셜데이터 분석:

(2) 법의 실효성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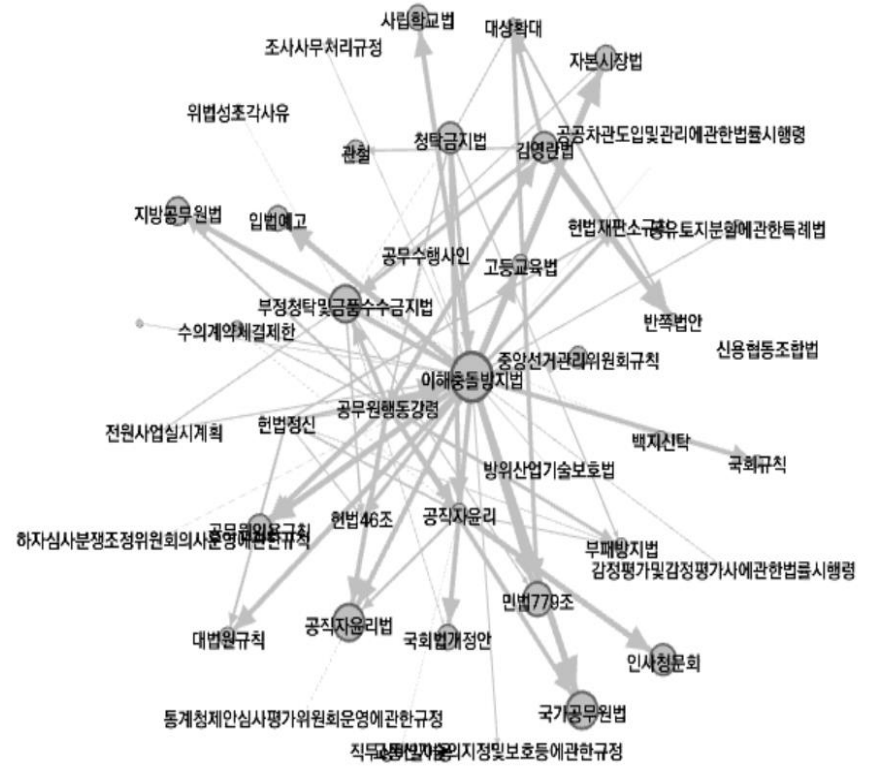
주요 이슈	관련 용어
제도개선	처벌강화, 재발방지, 입법공청회, 강제성, 투명성, 절름발이법, 불발
처벌	처벌강화, 국회의원처벌, 전액몰수, 벌금, 조사검사, 엄하게처벌, 척결, 지위남용
제도	관리메뉴얼, 인허가, 사전신고, 이해관계등록제, 승인, 블라인드채용, 사전검증, 상피제, 직무회피제, 공익신고, 조사검사,
조직	특검, 국가개혁특위, 특별감찰, 감사



이해충돌법 관련 소셜데이터 분석:

(3) 법체계 정합성 관련 지표

주요 지표	관련 법령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사운영에관한규칙
	조사사무처리규정
	교통신기술의지정및보호등에관한규정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청제안심사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채용 관련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채용 관련	지방공무원법
	각 종 공무원임용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중 “다른 법령”에 다른 예외 규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거나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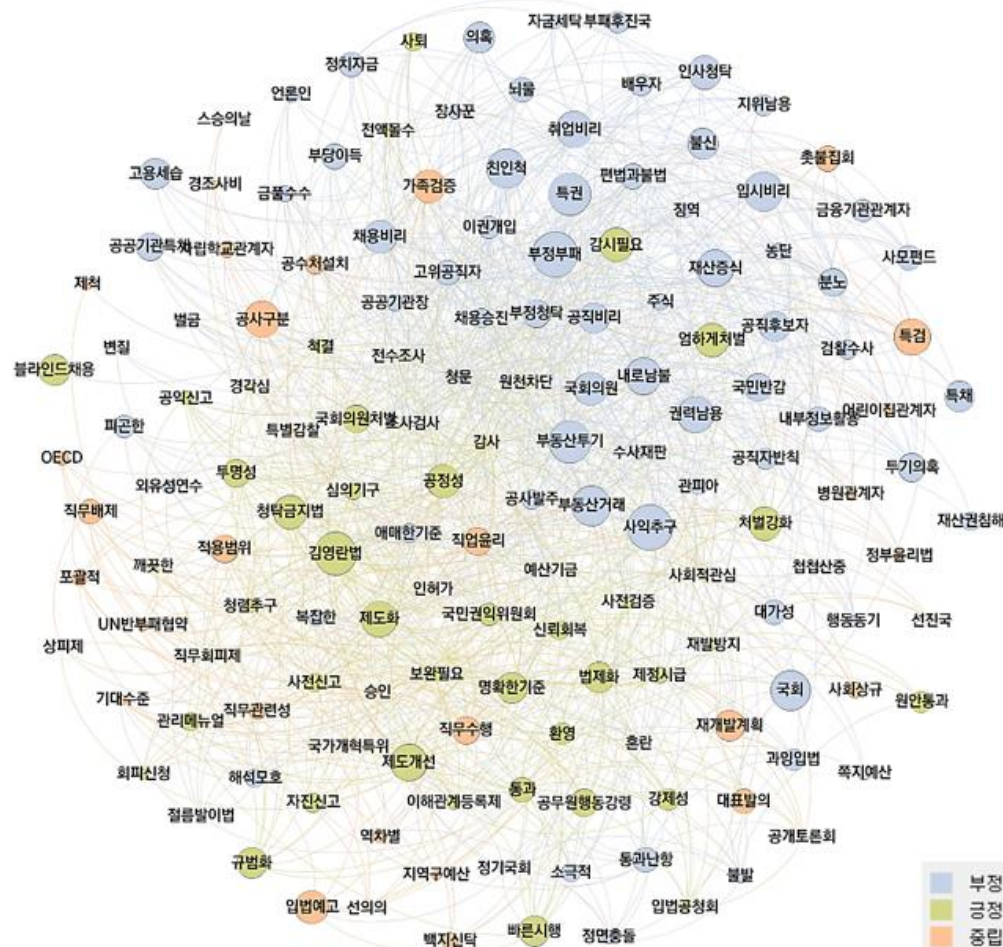
이해충돌법 관련 소셜데이터 분석:

(4) 입법 감정 분석

중립

부정

긍정



부정	(48.08%)
긍정	(29.49%)
중립	(2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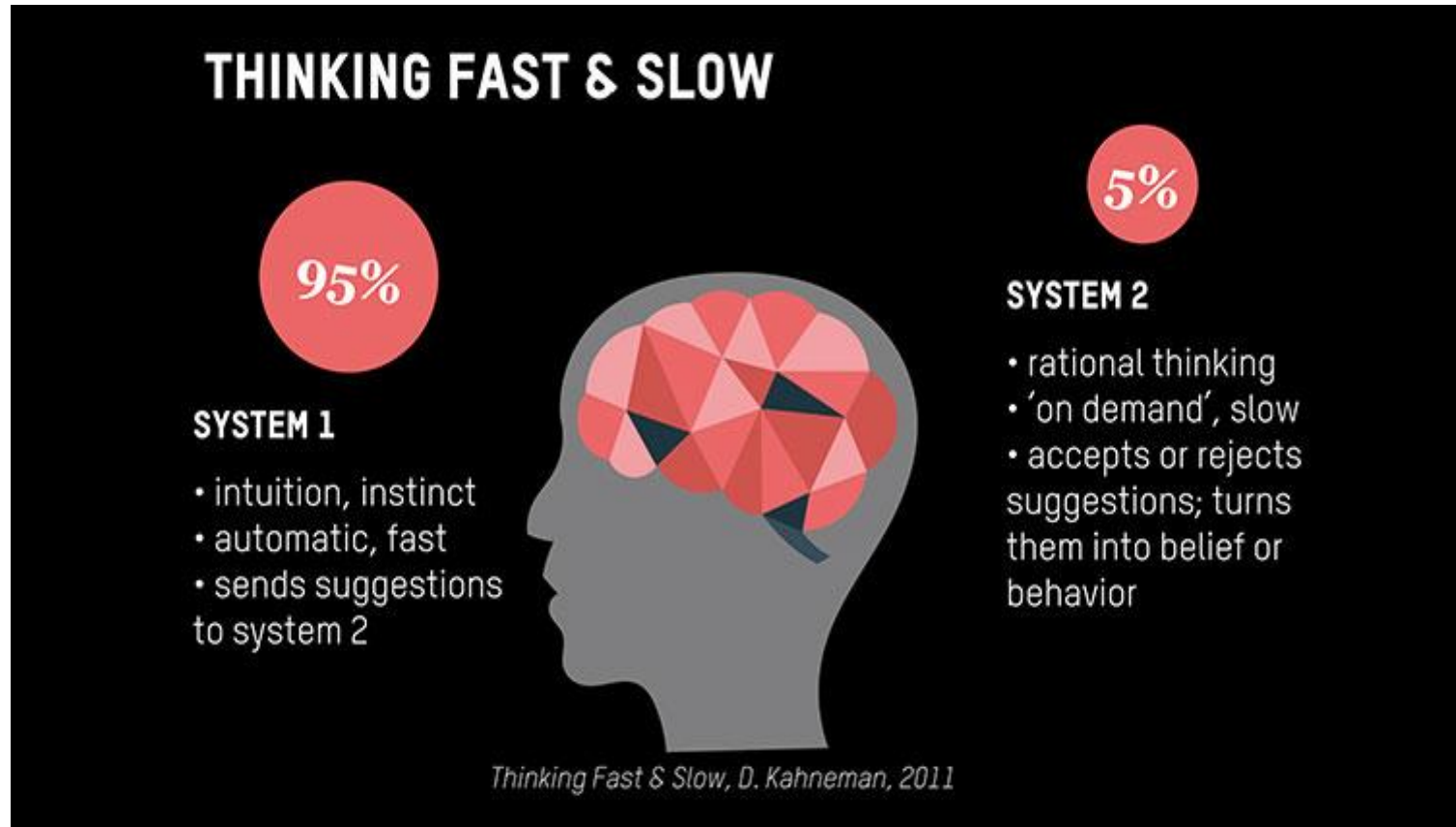
Ⅳ. 행동과학 기반 입법 분석

사람은 과연 이성적인가?



**문제는
눈높이야!**

인간 인지 시스템: 시스템 1과 시스템 2



“행동과학 기반 통찰(BI)”

- 행동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공공정책의 접근법은 (1) 실험과 통제에 의해 얻어지는 귀납적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2) 심리학적 이론의 토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공정책과 구별
- 기존의 주류 경제학과 근대 법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이기적인 합리적인 인간상이었는데, 행동통찰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
-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 법이론의 전제는 (특히, 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합리적’ 인간이었으나, 행동과학적 접근법과 ‘넛지’가 전제하는 인간상은 비합리(제한적 합리성)적 인간(게으름, 모방, 지체, 기억력·인지력의 한계, 편향성 등을 가진 현실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간의 선호는 선택 당시의 절차, 기술,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유도되어짐(Cass Sunstein)

RCT(Randomized Control 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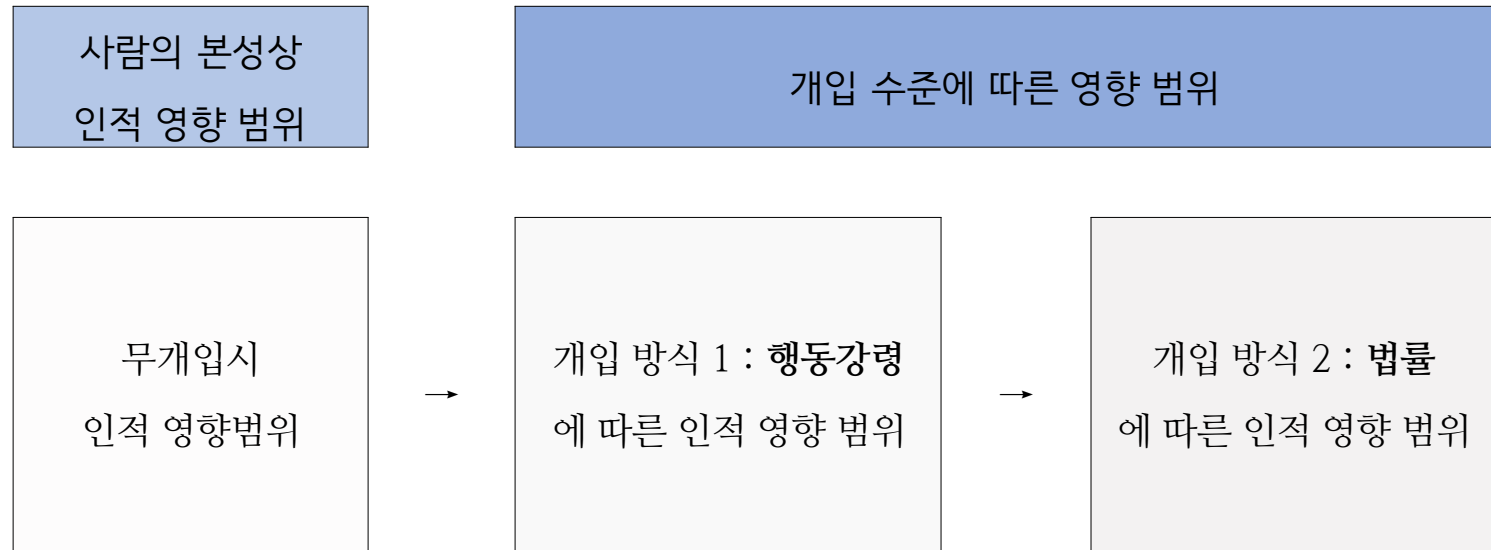
- 행동통찰의 접근방안의 대표적인 방법은 무작위 통제실험인 RCT (Randomized Control Test)
- RCT는, 원인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원인과 처치를 통한 결과 간의 인과관계 존재의 증거로 삼는데 용이
- RCT의 수행방식은 온라인설문조사(online survey experiment), 실험실 실험(used laboratory experiment), 현장 실험(a field experimen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 사례들이 있음

A silhouette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The face area is filled with a pink world map.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several colorful gears (orange, yellow, green, blue, grey) floating around the head.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개입 방식: 수준 및 영향 범위

	개입 방식	개입 수준
무개입	관련된 법제도나 내부기준이 없음	개입 없음
개입 방식 1	조직 내부 규칙(행동강령)이 존재하며, 위반시 징계	개입 수준 보통
개입 방식 2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개입 수준 높음



행동 개입 테스트를 위한 조사 대상

모 집 단	공직자 종사자		일반 국민	
조사대상	입법/사법/행정부 종사자		만20세 이상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유효표본	272명		800명	A 그룹 (제3자적 상황) 400명
				B 그룹 (본인의 상황) 400명
표본구성	사법기관	11명	표본추출	지역/성별/연령별 할당 추출
	중앙행정기관	47명		
	지방자치단체	111명		
	지방의회	19명		
	교육자치단체	264명		
	공직유관단체	48명		
	기타	10명		
조사방법	기관 협조를 통한 자기보고식 조사		온라인 조사	

(1) 상황 1: 도로공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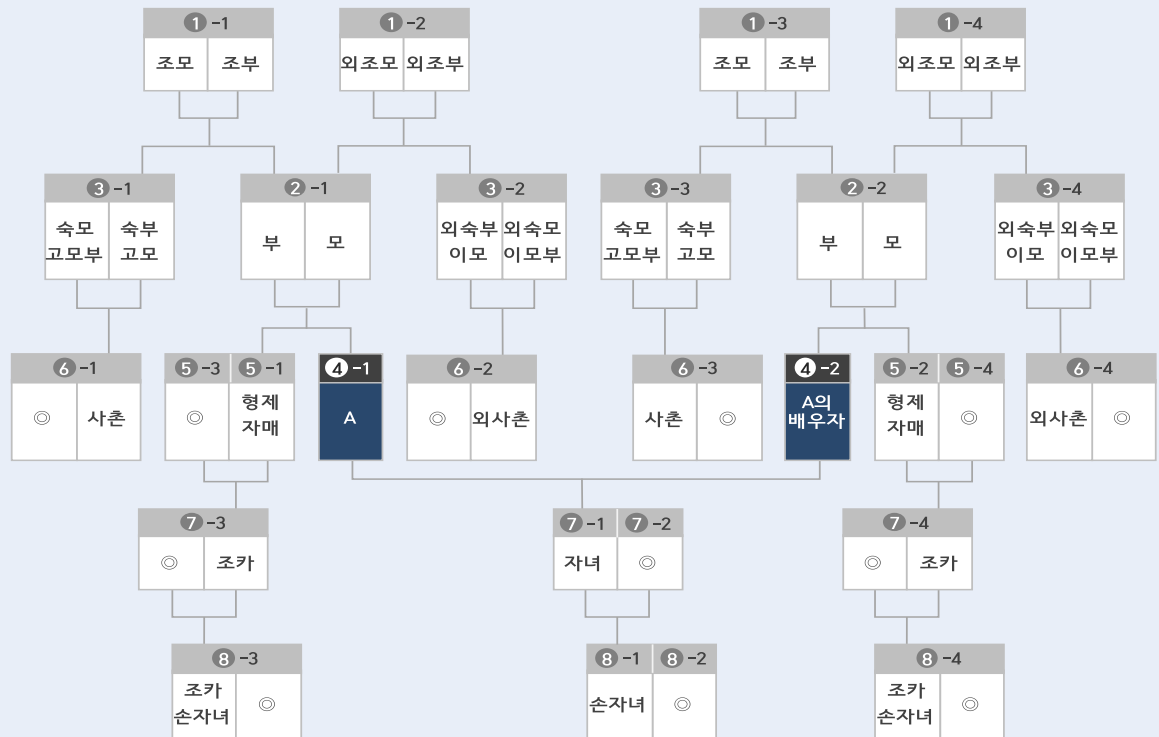


현재 A는 지방도로 발주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도로국장입니다.
A와 가까운 사람 B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보기 중 A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어야겠다고 고민할 수 있는 B와의 관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제도나 내부기준은 없습니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①-⑫)



- ⑨ B가 전 직장동료 및 상사인 경우
- ⑩ B가 동창회 선후배인 경우
- ⑪ B가 향우회 회원인 경우
- ⑫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4촌 이내 친족(증조, 증손 이상 제외)
◎ 각 배우자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정부안, 안철수. 신창현 대표발의안	권은희 대표발의안	채이배 대표발의안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공직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친 족	배우자		
	혈 족	직계혈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 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가 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다 음 인척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도로공사발주 사례에서의 행동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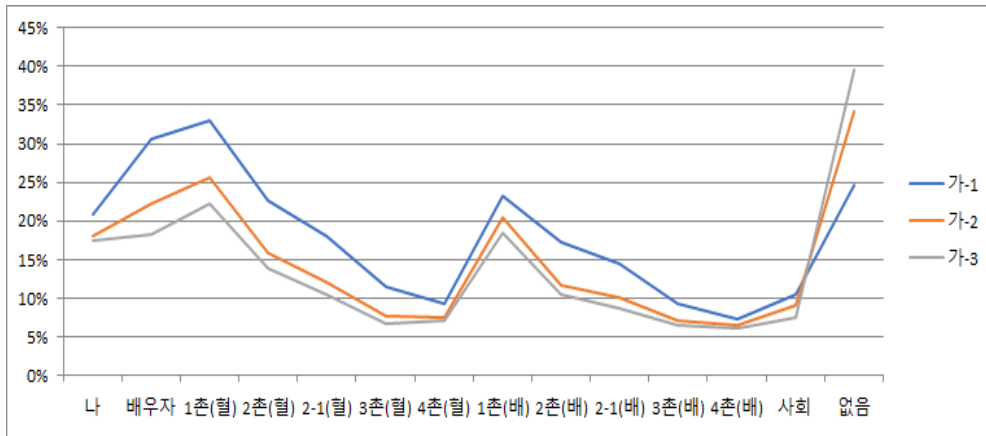
질문 (타인 기준: A)		"현재 A는 00시의 시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위로 인해 A와 가까운 사람 B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계획수립업무의 책임자인 A가 B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질문 (본인 기준: B)		"현재 귀하 00시의 시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위로 인해 귀하와 가까운 사람 B 소유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계획수립업무의 책임자인 귀하가 B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상황 변수	개입없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제도나 내부기준은 없습니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개입수준1	A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법은 아니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개입수준2	A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는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 발주 사례에서 입법 방식 별 영향도

일반인				공직자			
4촌구분	가-1 무개입	가-2 행동강령	가-3 이해충돌방지법	4촌구분	가-1 무개입	가-2 행동강령	가-3 이해충돌방지법
본인	21%	18%	18%	본인	16%	14%	12%
배우자	31%	22%	18%	배우자	52%	35%	31%
1촌(혈)	33%	26%	22%	1촌(혈)	42%	30%	26%
2촌(혈)	23%	16%	14%	2촌(혈)	30%	20%	17%
2-1(혈)	18%	12%	10%	2-1(혈)	26%	17%	15%
3촌(혈)	11%	8%	7%	3촌(혈)	23%	13%	11%
4촌(혈)	9%	7%	7%	4촌(혈)	18%	11%	9%
1촌(배)	23%	21%	18%	1촌(배)	22%	17%	16%
2촌(배)	17%	12%	10%	2촌(배)	28%	18%	15%
2-1(배)	14%	10%	9%	2-1(배)	31%	20%	18%
3촌(배)	9%	7%	7%	3촌(배)	19%	12%	10%
4촌(배)	7%	7%	6%	4촌(배)	15%	10%	9%
사회	11%	9%	7%	사회	15%	8%	7%
없음	25%	34%	40%	없음	25%	4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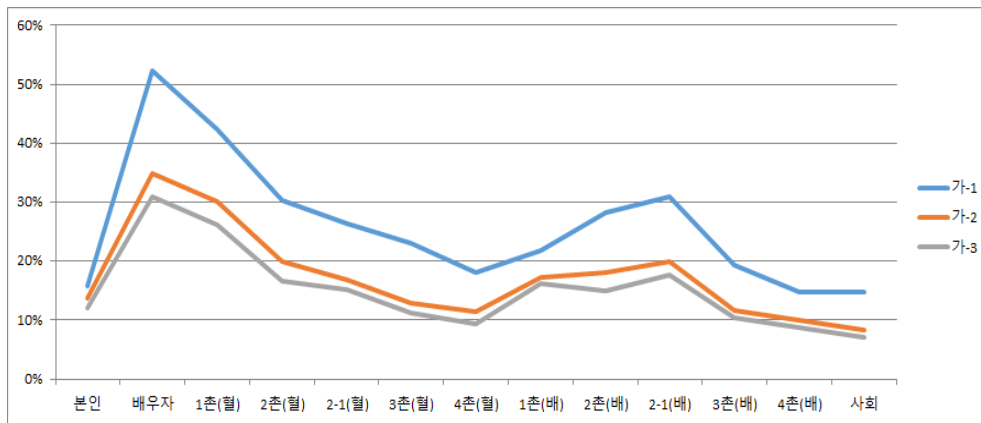
도로공사 발주 사례에서 입법 방식의 영향도

일반인



- 공직자: 입법효과 강함
-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효과 있음
- 행동강령 vs.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효과 차이 근소함
- 혈족: 근친일 수록 입법효과가 큼
- 자신 혈족>배우자 혈족: 입법효과 큼(3촌 이상은 유사)
- 동서지간: 영향도 상당

공직자



(2) 상황 2: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재 A는 OO시의 시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위로 인해 A와 가까운 사람 B 소유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계획수립업무의 책임자인 A가 B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B와의 관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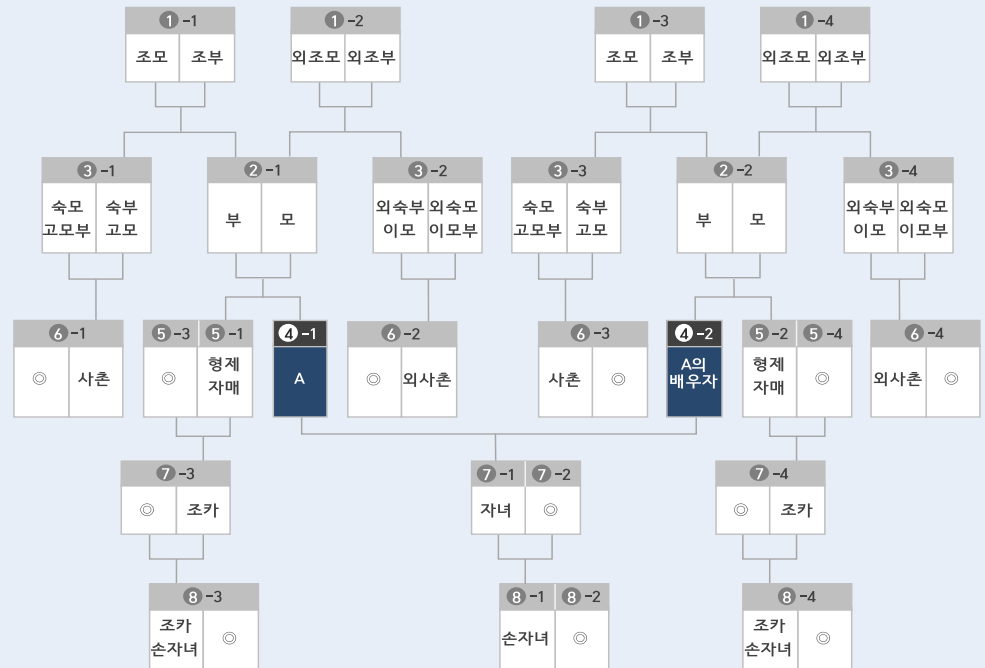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제도나 내부기준은 없습니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상황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①-⑫)



- ⑨ B가 전 직장동료 및 상사인 경우
- ⑩ B가 동창회 선후배인 경우
- ⑪ B가 향우회 회원인 경우
- ⑫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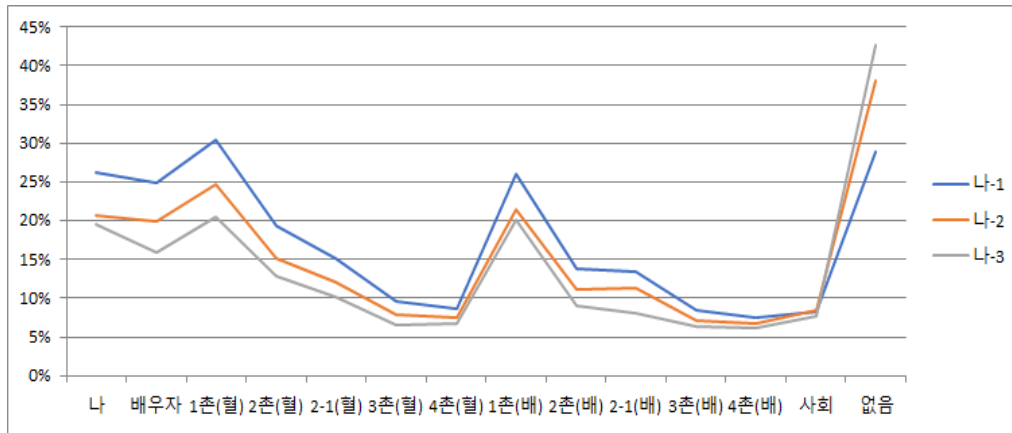
□ 4촌 이내 친족(증조, 증손 이상 제외)
◎ 각 배우자

도시 계획 수립 사례에서 입법 방식 별 영향도

일반인				공직자			
4촌구분	나-1 무개입	나-2 행동강령	나-3	4촌구분	나-1 무개입	나-2 행동강령	나-3 이해충돌방지법
본인	26%	21%	20%	본인	18%	17%	14%
배우자	25%	20%	16%	배우자	52%	37%	32%
1촌(혈)	30%	25%	21%	1촌(혈)	41%	31%	26%
2촌(혈)	19%	15%	13%	2촌(혈)	29%	20%	17%
2-1(혈)	15%	12%	10%	2-1(혈)	22%	16%	14%
3촌(혈)	10%	8%	7%	3촌(혈)	18%	13%	11%
4촌(혈)	9%	7%	7%	4촌(혈)	16%	12%	11%
1촌(배)	26%	22%	20%	1촌(배)	24%	20%	15%
2촌(배)	14%	11%	9%	2촌(배)	27%	18%	15%
2-1(배)	14%	11%	8%	2-1(배)	25%	18%	18%
3촌(배)	9%	7%	6%	3촌(배)	15%	12%	10%
4촌(배)	8%	7%	6%	4촌(배)	13%	10%	10%
사회	8%	8%	8%	사회	10%	7%	6%
없음	29%	38%	43%	없음	26%	4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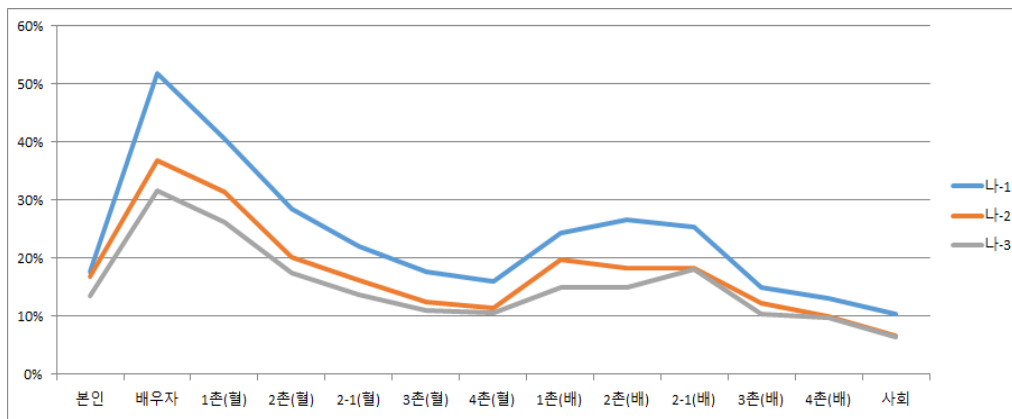
도시계획 발주 사례에서 입법 방식의 영향도

일반인



- 일반인: 입법효과 강함
- 무개입vs.행동강령: 입법효과 적음
- 무개입vs.이해충돌방지법: 입법효과 있음
- 배우자쪽 인척: 행동강령 입법효과 거의 없음
- 배우자 근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효과 있음

공직자



(3) 상황 3: 공공기관 채용



질문 1

A는 oo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A와 가까운 사람인 B가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가까운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가장 동감하십니까?



답항

① 공개경쟁을 거치는 것이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관장의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③ 기관장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경우든 취업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잘 모르겠다

기관장의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취업 제한의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질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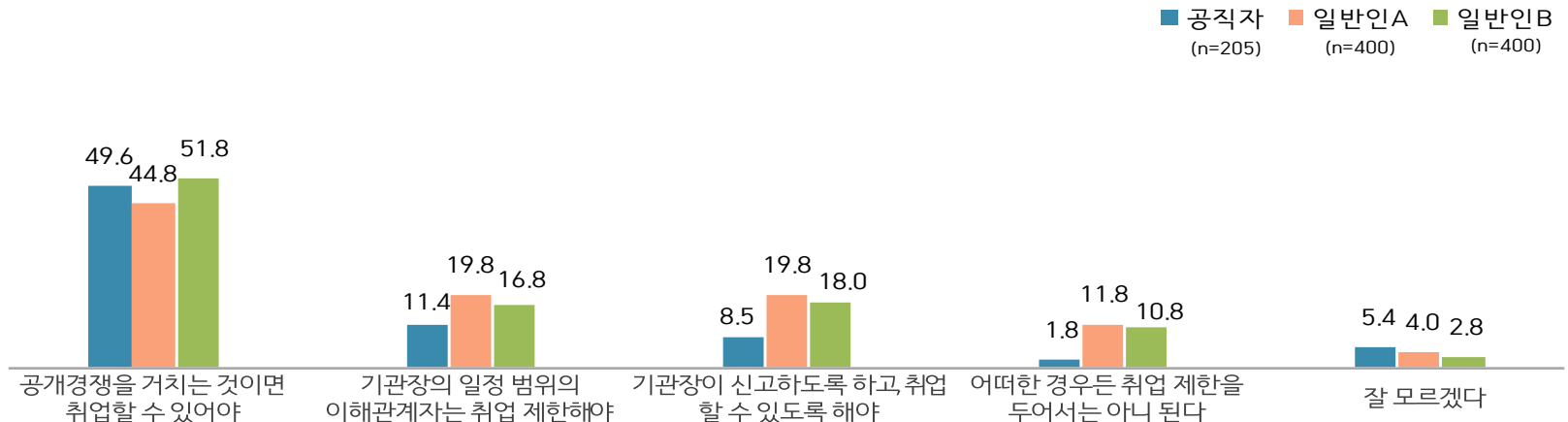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①~⑫)



□ 4촌 이내 친족(증조, 증손 이상 제외)
○ 각 배우자

공공기관 채용 사례: 취업 제한 수용도

질문 (타인 기준: A)	“A는 oo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A와 가까운 사람인 B가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가까운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가장 동감하십니까?”
	질문 2) 기관장의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취업 제한의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질문 (본인 기준: B)	“귀하는 oo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귀하와 가까운 사람인 B가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가까운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가장 동감하십니까?”
	질문 2) 기관장의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취업 제한의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공기관 채용 사례: 취업 제한 수용도

(단위 : %)

구 분			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					
			취업제한해야 한다			취업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자	일반인A	일반인B	공직자	일반인A	일반인B
배우자	A의 배우자		4.2	-	-	4.6	-	-
혈족 + 혈족의 배우자	1촌	부/모	79.2	51.9	40.3	71.9	28.7	31.2
		자녀	66.7	67.1	56.7	72.5	40.2	39.9
		자녀 배우자	54.2	55.7	37.3	38.6	29.9	24.0
	2촌	조모/조부	33.3	27.8	16.4	22.2	10.9	12.3
		외조모/외조부	33.3	27.8	14.9	20.3	10.0	8.7
		형제/자매	87.5	69.6	56.7	77.8	40.5	37.2
		손자녀	37.5	39.2	23.9	33.3	19.0	18.0
		형제/자매 배우자	41.7	54.4	40.3	43.8	23.7	21.9
		손자녀 배우자	33.3	34.2	20.9	21.6	15.6	14.1
	3촌	숙모/숙부 고모부/고모	41.7	27.8	19.4	15.7	8.4	10.2
		외숙부/외숙모 이모/이모부	41.7	26.6	17.9	17.0	10.9	11.4
		조카/조카 배우자	70.8	38.0	29.9	37.9	14.3	14.7
	4촌	사촌/사촌 배우자	66.7	38.0	29.9	28.8	13.7	13.5
		외사촌/외사촌 배우자	50.0	39.2	28.4	28.1	11.5	12.0
		조카 손자녀/조카 손자녀 배우자	37.5	27.8	14.9	10.5	8.4	9.3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1촌	(배우자)부/모	79.2	41.8	37.3	63.4	20.6	20.7
	2촌	(배우자)조모/조부	33.3	27.8	14.9	19.0	11.2	10.2
		(배우자)외조모/조부	33.3	26.6	14.9	16.3	9.7	10.2
		(배우자)형제/자매	83.3	55.7	38.8	72.5	18.4	20.4
		(배우자)형제/자매 배우자	45.8	45.6	31.3	38.6	14.0	15.3
	3촌	(배우자)숙모/숙부 고모부/고모	41.7	27.8	17.9	15.0	8.4	9.3
		(배우자)외숙부/외숙모 이모/이모부	41.7	25.3	17.9	13.1	7.5	9.3
		(배우자)조카/조카 배우자	70.8	34.2	28.4	35.9	12.1	12.9
	4촌	(배우자)사촌/사촌 배우자	54.2	36.7	31.3	26.8	11.8	13.2
		(배우자)외사촌/외사촌 배우자	58.3	32.9	22.4	22.2	9.7	10.8
		(배우자)조카 손자녀/조카 손자녀 배우자	37.5	27.8	14.9	9.2	6.9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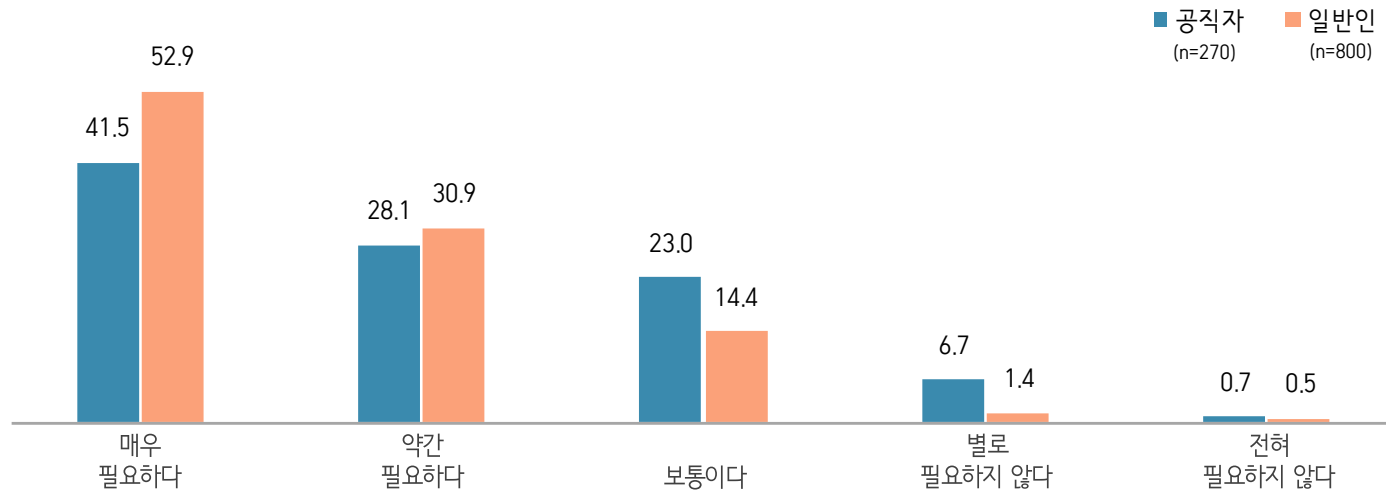
*공직자(n=24), 일반인A(n=79), 일반인B(n=67)

V. 설문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질 문	현재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까지 확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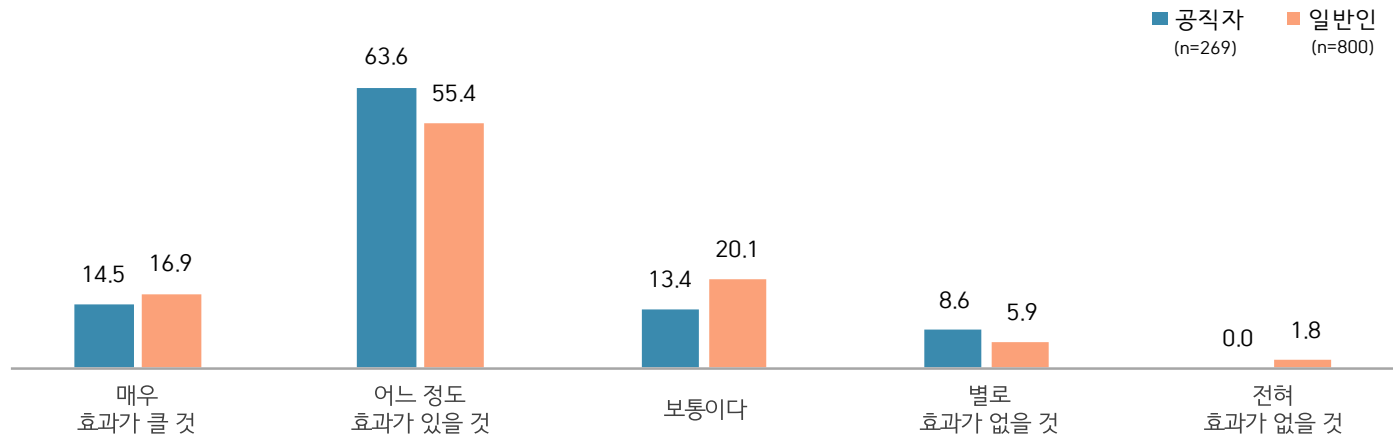


(공직자 모름/무응답 0.7%)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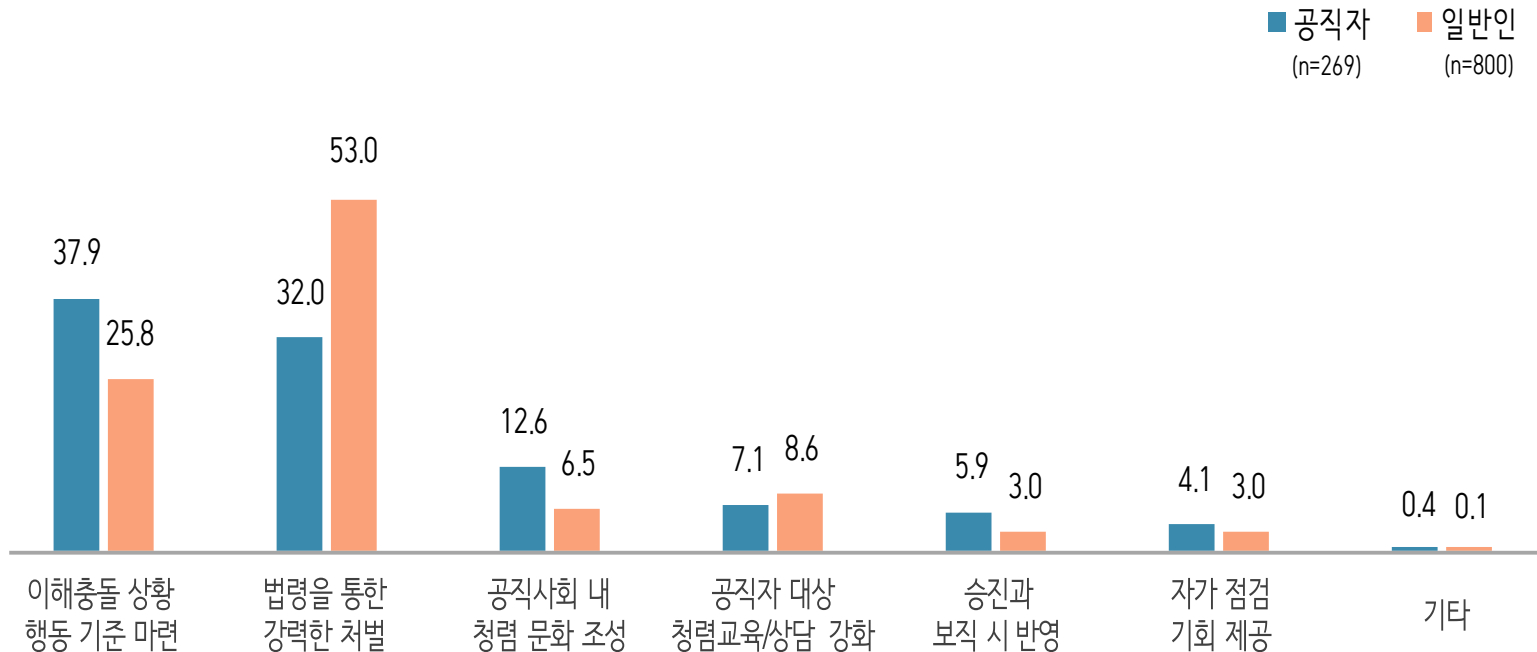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적 방법에 대한 의견

질 문	귀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단위 : %)



(공직자 모름/무응답 1.1%)

감사합니다!